



주간 통일정세

2010-27

Contents

- >> 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 노동신문 ‘당 중앙’ 언급…(6/30, 노동신문)

- 신문은 오는 9월 44년 만에 개최기로 한 당 대표자회와 관련한 사실에서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당 중앙의 두리(주위)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야 한다’고 강조

● 김정일, 군인가족 예술경연 참가자 만나(7/1,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제2기 3차 군인가족 예술소조 경연 참가자들을 만나고 기념촬영을 함.
- 김 위원장은 고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 광장에서 군인가족 예술소조원들을 만났으며 “모든 군인가족들이 불타는 조국애와 혁명적 군인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여 총 잡은 남편들과 한 전호에서 사회주의 조국방선을 철벽으로 지켜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밝힘.
- 김 위원장의 군인가족 예술소조원 만남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우동측 국방위원회 위원, 주상성 인민보안부장 등이 수행

● 北 김정일, 천안함사건 국제공조 분쇄 지시(7/2, 자유아시아방송(RFA))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외교·무역부문 기관과 북한 주민의 해외 방문을 허가하는 국가보위부 등에 천안함사건과 관련한 남한 주도의 국제공조를 깨기 위해 ‘결사항전’에 나설 것을 지시.
- 이 지시는 “국제공조를 짓부시는 투쟁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고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전인민적 결사항전”이라면서 “국제공조를 분쇄하지 못하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큰 난관이 조성된다”고 강조
- 김정일 위원장이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은 무역 업무나 친척 방문을 위해 중국을 방문중인 북한 주민들에게서도 확인되고 있음.
- 북한 량강도 혜산시의 무역관리국 일꾼은 “중국에 나오기 전 꾸준히 설득하고 해설해서 한사람의 지지자라도 더 만들어야 한다는 방침을 받았다”고 방송에 말했고,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를 방문한 북한 주민은 “출국 전 보위부 외사과에서 ‘중국 내 친척과 주변



사람들에게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설득전에 나서라’는 지침과 함께 3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다”고 밝힘.

■ 김정일 동향

- 7/1 김정일, 인민군 제2기 3차 군인가족 예술소조 경연 참가자들을 만나고 기념촬영(7/1, 중방)
 -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우동측 국방위원회 위원, 주상성 인민보안부장 등이 수행

■ 기타 (대내 정치)

-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道 반미군중대회들, 6/27~28 平南·北道, 양강도, 자강도, 黃南·北道에서 진행(6/28, 중통)
- 김일성 ‘카륜회의’ 조직지도 80돌 기념 사회과학부문 연구토론회, 최태복 등 참가下 진행(6/29, 중통)
-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쫓기모임, 평안북도·낙원기계연합기업소·12월 5일청년광산·용천군 장산협동농장에서 진행(6/30, 중방)
- 北, 민주공고 독립 50주년 기념집회 평양에서 개최(6/29, 중통)
-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반미군민대회, 6/28~30 강원도·咸南·咸北·남포시에서 각각 진행(6/30, 중통)
- 訪北 한상렬 목사, 6/30 사리원시 미국협동농장에서 농업근로자들과 상봉(6/30, 중통)
- 양형섭, 7/1 중국 국가라디오영화TV방송총국 대표단(단장 : 전진부국장)과 담화(7/1, 중통)
-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 反美 軍民대회, 咸北道와 개성시에서 각각 진행(7/1, 중방)
 - 오수용(前 내각 부총리) 咸北 黨 책임비서 등 연설
-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42차 전원회의, 7/1 리용철(청년동맹 1비서/보고) 등 참가下 백두산선군천년발전소 건설장에서 진행(7/2, 중방)

나. 경제

● 北…주체비료공장서 폭발사고, 30여명 사망(6/2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평안남도 안주시에 있는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 지난 4월 하순 큰 폭발사고가 발생, 노동자 30여명이 사망
- 친척 방문을 위해 신의주에 온 안주 주민 김모씨는 RFA에 “4월 23일 남흥청년화학공장 나프타 공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0여명이 숨졌다”면서 “당국은 소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고 후 몇 새만인 29일 황급히 비료 생산공정 준공식을 했다”고 말함.



● **北…대성무역, 금광 이익분배 안해 中투자자와 분쟁(6/29, 자유아시아방송(RFA))**

- RFA는 단둥의 대북소식통을 인용, “중국 국적의 조선족 사업가가 북한 대성무역총회사와 평안북도 천마산의 금광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설비와 장비를 투자했다”면서 “그러나 투자가 모두 끝나고 금이 생산되는데도 중국 투자자에게 이익이 배분되지 않아 다툼이 벌어졌다”고 밝힘.
- 중국측 투자자는 대성무역에 여러 차례 항의했는데도 ‘담당자가 바뀌어 모르겠다’는 답변만 되돌아오자 ‘해결사’를 동원해 단둥(丹東)에 들어온 대성무역 소유 화물트럭을 몇 대 강제 압류했고, 그 후 대성무역은 자사 화물차를 중국쪽에 보내지 못하고 있음.
- RFA는 “중국측 사업자가 천마산 금광 개발에 투자한 시점은 2005년 경인데, 소문으로는 전체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이라고 한다”고 덧붙임.

● **中…조선족 여성기업가 北비닐시장 평정(7/1, 연변신식향)**

- 중국의 조선족 여성 기업가가 북한 진출 5년 만에 북한 비닐제품 시장을 평정.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투먼(圖們)의 ‘화인비닐제품회사’를 경영하는 박미화(40)씨가 북한 진출 5년 만에 연간 1천500만 달러(186억 원)어치를 수출하며 북한 비닐제품시장에서의 점유율을 85%까지 끌어올렸다고 전함.
- 2003년 함경북도 온성군에 들어가 비닐제품을 팔기 시작한 그녀는 곧 라진과 청진 등으로 꾸준히 사업 영역을 확대. 신용을 지키면서 북한 측의 인정을 받게 된 그녀는 마침내 북한 비닐제품 시장을 석권하면서 화인비닐제품회사를 중국의 대표적인 대북 비닐 수출업체로 자리매김시킴.

● **올 상반기 국제사회 대북지원 급감(7/1, 자유아시아방송(RFA))**

- 올해 상반기 유엔을 통해 북한에 제공된 국제사회의 지원이 미화 1천166만달러 규모로 작년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
- 올해 1~6월 유엔 인도지원조정국(OCHA)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공한 현금과 물품은 총 1천166만7천890달러(한화 143억3천만원)로 작년 전체 지원액(5천900만달러)의 19.8%
- RFA는 “상반기 지원액 중 약 800만달러는 유엔 긴급중앙구호기금(CERF)에서 나간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순수 지원은 약 370만 달러로 3분의 1 밖에 안 된다”면서 “대북 지원에 참여한 국가도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세 나라뿐이며, 작년에 지원했던 캐나다, 호주, 핀란드, 노르웨이 등은 올해 빠졌다”고 전함.
- RFA는 또 “지난 4월 스위스가 280만 달러 상당의 유제품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제공한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이 전혀 없다”면서 “이대로 가면 올해는 지난해 지원 규모에 미치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

- 대북 지원이 급감한 이유로 RFA는 지진피해를 입은 아이티와 칠레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집중, 남북한 갈등으로 인한 한국의 지원 중단, 유럽의 경제위기 등을 꼽았음.

● 北…대계도 간석지 공사 준공(7/1, 조선중앙방송)

- 북한 평안북도 대계도의 간석지 매립공사가 지난달 30일 끝남. 조선중앙통신은 “대계도 간석지가 완공돼 한 개 군 면적과 맞먹는 부침 땅이 얻어졌다”면서 “이로써 나라의 농업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하기 위한 밑천이 마련됐다”고 밝힘.
- 준공식에는 최영림 내각 총리,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락희 부총리, 김평해 평북도 당 책임비서, 김창식 농업상, 김의순 국가검열상 등이 참석
- 1980년대 초 시작된 이 사업은 평북도 염주군과 철산군 앞바다의 다사도부터 가차도, 소연동도, 대계도, 소계도, 철산반도까지 이어지는 총 13.7km를 독으로 막아 매립하는 것으로, 북한 매체들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1개 군의 경지면적과 맞먹는 8천800여 정보의 땅이 생긴다고 말해옴.

■ 기타 (대내 경제)

- 운산공구공장 현대화 공사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 (6/28, 중방)
- 혜산열사능 준공식, 양강도 혜산시 연봉산기슭에서 진행(6/29, 중통)
-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6/21 현재 상반기년도 생산계획 102% 완수 및 학포탄광의 석탄생산계획 1.2배 장성 등 전국 각지 탄전들의 석탄증산 투쟁 및 생산계획 초과 달성 보도(6/30, 중통)
- 대동강가구공장 창립 60돌 기념보고회, 6/29 현지진행(6/30, 중방)
- 금야군(咸南), 전기문제 해결 위한 금야강2호발전소 건설 추진 중 (7/1, 중방)

다. 사회·문화

● 中 연변에 北요원 대거 투입…탈북자 체포 혈안(6/28, 자유북한방송)

-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해외 ‘반탐(방첩)요원’을 중국 연변(延邊) 지역에 대거 투입해 탈북자 체포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 선양(沈陽) 주재 통신원은 “이달 초 북한 보위부가 반탐요원 100여명을 옌지(延吉)시에 보냈다”면서 “이들은 신분을 숨긴 채 시내 호텔 두 곳에 머물면서 연일 탈북자 검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전에는 옌지시 공안국에 8명 정도 북한 요원들이 상주했으나 지난 2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지금은 15명이 넘는다”면서 “작년 말



북·중 양국의 공안당국자들이 국경 봉쇄와 탈북자 단속 강화에 합의함에 따라 북한 요원들이 대폭 증원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 **北…아리랑 공연에 ‘北·中친선 장면’ 넣는다(6/29, 조선신보)**

- 8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2개월여 동안 진행될 북한의 집단체조 공연 ‘아리랑’에 중국과의 친선을 강조하는 ‘북·중 친선 장면’이 새로 도입
- 북한 ‘아리랑’ 공연 국가준비위원회의 김금룡 연출실장은 “2010년도 판 아리랑 공연의 특징은 ‘친선 아리랑’이라는 장면이 새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는 조선전쟁(6/25전쟁) 발발 60주년이자 중국 인민지원군의 참전 60주년인 올해 북·중 친선에 관한 김일성 주석의 고귀한 유산을 계승·발전시켜 나가자는 뜻”이라고 말함.

● **北선수단, 환영행사 없이 귀국(6/30, 조선신보)**

- 44년만에 진출한 ‘2010 남아공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북한대표팀이 29일 평양에 도착해 체육 분야 관계자들과 가족들의 환영을 받았음.
- “남아프리카 월드컵 경기대회에 출전한 조선팀 감독과 선수들이 29일 오후 평양비행장에 도착했다”면서 “마중 나온 체육 부문 관계자들이 ‘수고했다’며 위로하고 가족들이 꽃다발, 꽃묶음을 건네주며 환영하자 무표정이었던 선수들이 미소를 지었다”고 전함.
- 또한 “44년 만에 월드컵경기대회에 출전한 조선팀의 성적은 조국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출전한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고, 월드컵 출전의 자신감과 경험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라고 말함.
- 또 귀환한 선수단에는 ‘조총련 3총사’로 통하는 정대세, 안영학, 량용기 세 선수와 북한팀 코치를 맡았던 재일본 조선인축구협회의 김광호 부회장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들은 내달 1일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

● **FIFA, 北축구시설 개보수에 155만 달러 지원(7/1,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축구연맹(FIFA)은 북한의 축구 시설 개보수를 위해 2001년부터 지금까지 미화 155만달러(한화 19억원)를 지원
- FIFA 홍보국은 RFA에 보낸 이메일에서 “2001년에 45만 달러를 들여 김일성경기장의 인조잔디를 교체했고, 2004년에는 북한축구협회의 요청으로 국가대표팀 합숙소와 축구협회 건물 보수에 41만 달러를 지원했다”면서 “지금은 69만 달러를 투입해 평양 서산축구경기장의 청소년합숙소를 고쳐 짓고 있다”고 밝힘.
- 이번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한 북한대표팀 선수들도 FIFA의 지원을 받아 보수공사를 마치고 2006년 1월 다시 문을 연 합숙소에서 장기간 합숙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짐.



● WFP, 북한에 지원할 식량 9월이면 바닥(7/2,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사회의 무상원조 감소로 오는 9월이면 유엔이 북한에 지원할 식량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됨.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레나 사벨리 북한 담당 대변인은 RF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식량으로 앞으로 두 달간 제한된 규모의 대북 지원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9월이면 보유한 식량이 모두 떨어질 것”이라고 밝힘.
- 사벨리 대변인은 이어 “WFP는 북한의 어린이,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 250만명에게 식량을 집중 제공해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2개년 사업을 지난 1일 시작했다”면서 “이 사업을 위해 미화 9천 6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난달 27일 현재 브라질(20만 달러)과 노르웨이(7만4천 달러)만 기부를 해 전체 예산의 1%만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
- 그는 “오는 9월까지 새로운 기부 국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대북 지원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임.

● 北, 고찰 심원사 복원작업(7/2, 조선신보)

- 신보는 북한이 최근 황해북도 연탄군 연탄읍 자비산중턱에 있는 고려말 사찰인 심원사에 대한 대대적인 복원작업을 마쳤다고 전함.
- 신보는 이어 심원사의 중심건물인 보광전은 황해북도 사리원시 성불사의 응진전, 평안북도 박천군에 있는 무량수전과 함께 북한지역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의 하나라면서 “보광전의 건물기둥과 지붕의 사개를 바로잡고 단청을 복원하는 한편 네 추녀 밑에 풍경을 달고 받침기둥을 세웠으며, 탕화를 미술전문가들이 새로 그렸다”고 설명
- 고려시기 황해도내 모든 사찰들을 통솔하는 도급(道級)사찰이었던 심원사는 원래 9세기 선승이자 풍수지리학의 대가였던 도선국사가 성불사와 함께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1374년 고려말 유학자 이색의 권유로 대대적으로 보수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고쳐졌고 1960년대 마지막으로 크게 보수됐다고 신문은 덧붙임.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제36차 <정일봉상> 전국 청소년 학생체육경기대회(5/17, 개막), 사리원에서 폐막(6/28, 중통)
- 김일성상 계관작품 경희극 ‘산울림’ 공연, 자강도 희천시에서 진행(6/28, 중통)
- 제13차 정일봉상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6/24 진행), 폐막(6/29, 중통)
- 경희극 ‘산울림’, 6/30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첫 공연(7/1, 중통)
- 전국도대항 종합체육경기대회(6/15~30) 폐막식, 해주경기장에서 진행(6/30, 중통)



2. 대외정세

가. 일반

- **北…中상인 첩보활동 감시 강화(6/30,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당국이 상거래로 위장한 중국인들의 첩보 활동을 막기 위해 중국 상인들에 대한 감시와 입국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RFA는 무역 일을 하는 북한 주민의 말을 인용, “북한에 드나드는 중국 상인들 가운데 정보를 수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단서가 드러나, 중앙에서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면서 “중국 접경 지역의 보안부와 보위부 요원들이 중국 상인이 체류지로 신고한 북한내 친척집 등을 불시 방문해 조사하고, 부재중이면 즉시 행방을 추적한다”고 전함.
 - 방송은 또 “북한의 통행검사소는 중국 상인들한테서 사소한 혐의라도 잡으면 ‘까만 도장’을 찍어 곧바로 출국시킨다”면서 “이런 경우 다시는 북한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설명
 - 이어서 “최근 자강도 만포시에서 체포된 중국인들의 경우 군수산업 지역인 자강도 강계시를 오가다 첩보활동 혐의를 받았다”면서 “보위부는 이들 중국상인의 소지품 가운데 소형녹음기가 내장된 MP3플레이어 등을 정탐행위의 증거물로 보고 있다”고 전함.
- **北…천안함 공동조사 필요, 안보리에 서한(7/1,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
 - 유엔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주재 북한 신선호 대사는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라우드 헬러 대사 앞으로 보낸 29일자 서한에서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검열단을 한국과 미국이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보리 이사국들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
 - 북한은 아울러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통해 천안함 사건이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이 회담에서 군사정전위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 기타 (대외 일반)

- 日 외무상의 北 위협에 대처한 美-日동맹강화 발언 관련 “美軍 철수를 요구하는 민심을 외면하고 대미추종정책에 매여 달리려는 일본 정부의 시대착오적 행위”라고 비난(6/29, 중통·노동신문/시대착오적인 행위)
- 김영남, 6/28 콩고 독립 50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6/29, 중통)
- 김영남, 수단 혁명절 21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6/29, 중통)
- 박의춘(외무상), 수단공화국 외무상에 임명된 ‘알리 아흐마드 카르티’에게 축전(6/29, 중통)



- 北 인민보안부 정치일꾼 대표단(단장:윤시환 중장), 중국 방문차 평양 출발(6/29, 평방)
- ‘안근성’ 멕시코駐在 北 대사, 6/24 同國 대통령에게 신임장 전달(6/30, 평방)
- 최영림, 新任 핀란드 수상 ‘마리 키비니에미’에게 축전(6/30, 중통)
- 김영남, 부룬디 대통령에게 독립절 즈음 축전 발송(7/1, 중통)

나. 6자회담(북핵)

● 北…핵억제력,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강화(6/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미국 정부의 과거 핵무기사용 검토 사실을 거론하면서 “우리의 핵억제력을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1969년 북한의 미국 정찰기 격추사건 당시 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전술핵무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내용의 기밀문서가 공개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역사적 사실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길밖에 없다는 우리의 결단이 천만번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이어서 “미국이 역대적으로 조선(북한)에 대해 ‘힘의 정책’을 추구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무기를 사용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면서 “지난 4월 ‘핵테세 검토보고서’(NPR)를 발표하면서 조선을 핵무기 불사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미국의 현 행정부도 조선에 대한 핵위협 정책에서는 전임자들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

● 中…北 핵억제력 강화에 비핵화 강조(6/29,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핵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북한의 발표에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억제력 강화를 발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요구받고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 근본”이라면서 이같이 강조
- 그는 “시급한 과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국면을 변화시켜 더 이상 이를 격화시켜서는 안 되며 충돌 발생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각 당사국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천안함 사건을 포함한 현재의 당면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것을 주문
- 또한, “유관 당사국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유관 당사국의 공통된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함.



3. 대남정세

● 南·北…남아공월드컵서도 천안함 신경전(6/30, 연합뉴스)

- 남북한이 2010 남아공월드컵 현장에서 천안함 사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짐.
- 지난 11일 요하네스버그의 시티사커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개막식. 남아공 정부는 자국 주재 각국 대사들을 개막식에 초청했고, 김한수 주남아공 한국대사와 안희정 주남아공 북한대사 모두 이에 응함. 외교에 따르면 당시 김 대사가 잠시 화장실에 갔을 때 북한의 안 대사가 뒤따라와 김 대사의 한쪽 팔을 움켜 잡으면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요”라고 위협조로 말했다고 전해짐.

● 北…南의 전작권 전환연기 비난(7/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일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여 연기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위험천만한 현 사태를 더욱 극단으로 몰아가며 우리와의 전면전쟁도 불사하는 극히 엄중한 도발”이라고 주장
- 통신은 이날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한 사실에 언급, “조선반도(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의 전쟁위험은 더욱 증대되게 되었다”고 말함.
- 담화는 이어 “괴뢰군 함선침몰 사건이 일본의 후텐마 미군기지 이설 요구를 늘려버리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노린 미국의 특대형 모략극이었다는 것을 여지없이 확증해 주고 있다”고 강변

[천안함 관련]

○ 천안함 군사도발 사태에 대한 우리측 조사결과와 對北조치 持續 비난

- 대통령께서 「민주평통」 유라시아지역 자문위원들과의 간담회시 對北발언(북이 바른길로 가는 과정, 북이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등) 관련 “함선 침몰사건을 조작한 범죄행위를 덮어버리며 반공화국 대결소동으로 집권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기만적 낚두리”라고 비난(6/28, 평방/역적패당의 얼토당토 않는 바른길 타령)
- 통일부장관의 對北발언(北 어뢰공격설, 사죄, 책임자처벌 등) 관련 실명을 거론하며 함선침몰사건에 대한 “사죄와 처벌받을 자는 이OO패당”,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며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6/28, 중통·노동신문/대결미치광이의 악의에 찬 낚두리)
- 韓·美·日 국방장관회담(6/5, 싱가포르) 개최 관련 “함선침몰사건을 구실로 3각 군사동맹을 완전히 실체화하고 유엔을 통한 대조선 압박기도가 물거품이 되는 경우 선불질을 해보려는 호전적 기도의 발로”라고 비난(6/28, 중방/계획적인 전쟁도발 책동)



- 우리 정부의 천안함 피격사태 민군합동조사단의 유엔 파견, 설명회 등 외 교활동 관련 “우리(北)에게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지만 그것은 세계의 공정한 여론으로부터 냉대를 받고 있다”고 주장(6/28, 평방/국제사회의 공정한 여론에 대한 도전)
- 외통부장관의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발언(현금차단 등 美日의 효과적 對北제재 등)에 대해 “극단적인 제재소동으로 확대하며 대결전쟁소동에 날뛰는 역적패당의 망동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持續 위협(6.30, 평방/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을 해치는 역적)
- 천안함 피격사건 계기 대북심리전 재개, 서해상 韓美 연합대잠수함 훈련, PSI 훈련 등을 “남북간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도발책동”으로 비난하며 對北 심리전 재개시 “전면적인 군사적 타격의지를 단호한 실천행동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持續 위협(6.30, 중방/북침을 노린 심리모략전 재개 소동)
- 親北 단체·인사 및 각국 공산당들(러시아 공산당 연해변강초, 베네수엘라 공산당 기관지,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 등)의 천안함 피격사태 관련 對北 지지 성명·담화·시위·소개(6.30, 중방/공화국의 단호한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세계의 벗들)

■ 기타 (대남)

- 北 판문점대표부, 6/28 韓美가 “판문점 회의장 남측지역에 각종 중무기들을 끌어들이는 위반행위를 감행했다”며 인민군 측의 원칙적 입장 통지(6/28, 중통·중방·조선신보)
- 서해상 韓美 대규모 연합훈련실시 계획 등 관련 “對北 선제타격을 위한 위험천만한 불장난 소동”이라고 비난하며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무자비한 징벌로 침략자들을 송두리째 드러내고 최후 승리를 안아올 것”이라고 위협 (6/29, 중통)
- 아프가니스탄 再파병 계획 관련 “미제의 침략전쟁에 사병들을 대포밥으로 삼겨 바치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며 “친미사대매국노들을 역사의 심판장에 끌어내 단호히 징벌할 것”을 주장(6/29, 중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천안함’ 안보리 회부 한달..“금주 고비”>(7/4)

- 정부가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 지 4일로 한 달이 됐지만 구체적인 처리방향은 여전히 오리무중임. 정부는 민·군 합동조사단이 밝힌 것처럼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한 것을 한반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 안보리의 단호한 대응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음.
- 특히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에 소극적인 중국이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음. 안보리는 지난달 14일 한국과 북한의 ‘천안함 브리핑’ 공방 이후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 한국 등 소위 ‘P5+2’를 중심으로 안보리 대응과 관련한 문안을 집중 협의해왔음. 그러나 북한을 공격주체로 명시하는 표현이나 문구를 넣어서는 안 된다는 중국의 입장은 상당히 확고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게 소식통들의 전언임.
- 하지만 안보리의 분열상 노출 등을 우려하는 관련국들이 어떤 형태로든 결론 도출에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음. 외교 당국자는 “이번 주에도 안보리 대응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자칫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면서 “중국과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이번 주 안에는 어떻게든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음. 한편 지난달 캐나다에서 열린 G8(선진8개국) 정상회담에서 ‘한국 해군 장병 46명이 희생된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개탄하며 북한이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민·군 합조단 조사결과의 맥락에서 이를 야기한 공격을 비난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지만 이 성명이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의미있는 참고’가 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 <미·중 대북전문가 ‘천안함 시각차’ 뚜렷>(7/4)

- 천안함 사태를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의 시각차는 양국 대북 전문가들에게서도 뚜렷하게 드러났음. 동아시아재단이 최근 발간한 계간 영문저널 글로벌아시아 여름호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정치적으로 비용을 감수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 전문가와 대화를 통해 무력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는 중국 전문가의 기고문이 나란히 실렸음.



● “北김정일, 천안함 사건 국제공조 분쇄 지시” <RFA>(7/2)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외교·무역 부문 기관과 북한 주민의 해외 방문을 허가하는 국가보위부 등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남한 주도의 국제공조를 깨기 위해 ‘결사항전’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전했다.
- 특히 김 위원장은 지시문에서 이 같은 국제공조 파괴에 ‘강성대국’ 건설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RFA는 북한 회령시 무역기관 일꾼의 전언을 인용,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김정일의 지침이 내려온 것은 지난달 29일이고 그 다음날 이를 전파하기 위한 간부강연회가 회령시당에서 열렸다”면서 “6월29일 방침”으로 명명된 이 지시는 앞서 5월28일과 6월7일에 내려왔던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국제공조를 깨기 위해 전인민이 결사항전에 나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 지시는 “국제공조를 짓부시는 투쟁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고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전인민적 결사항전”이라면서 “국제공조를 분쇄하지 못하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큰 난관이 조성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RFA는 밝혔다.
- 김정일 위원장이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은 무역 업무나 친척 방문을 위해 중국을 방문중인 북한 주민들에게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RFA는 말했다.
- 북한 량강도 혜산시의 무역관리국 일꾼은 “중국에 나오기 전 꾸준히 설득하고 해설해서 한사람의 지지자라도 더 만들어야 한다는 방침을 받았다”고 방송에 말했다고,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를 방문한 북한 주민은 “출국 전 보위부 외사과에서 ‘중국 내 친척과 주변 사람들에게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설득전에 나서라’는 지침과 함께 3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해외 공관에도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총력 외교전에 나서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주요국 ‘결심’만 남은 안보리 ‘천안함 대응’>(7/2)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사태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각국의 결심만 남은 상태까지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보리 논의의 향방을 좌우할 중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이 2일 전했다. 상임이사국(P5)과 일본, 한국 등 주요국들 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고, 지난달 30일에는 안보리 의장이 전체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요약 보고(summary briefing)를 하는 등 안보리 내에서의 논의는 충분히 이뤄졌다.
- 한 소식통은 “안보리에서 주요 이사국들간 논의는 거의 매일 이뤄져 왔다”면서 “이제 각국의 결심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도 “각국 본부에서 훈령만 떨어지면 안보리에서 언제든지 결론을



-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해 왔던 러시아 역시 한국을 방문했던 전문가들의 보고서 작성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을 전망이다. 러시아 외무부의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대변인은 지난 1일 “러시아 전문가들이 최종적인 보고서를 끝내고 있다”라며 “보고서는 국가 지도부에 제출될 것이고 그런 다음 러시아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장성명이나 결의 등 어떤 형식으로든 이번 주 안에 안보리에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아직은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함. 안보리 문안 협의 과정에서 북한의 공격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나 문구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중국의 입장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임.
- 특히 중국은 구체적으로 문안에 ‘북한’을 넣어서 비난한다거나, ‘공격(attack)’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당국자는 이와 관련, “천안함 사태를 안보리에서 되도록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북한의 공격을 규탄하는 데 대한 중국의 거부감이 커서 이번 주 안에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 <중국 안보리서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7/2)

- 천안함 사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회부된 지 이번 주말을 지나면 꼭 한 달이 되지만,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음. 당초 예상대로 중국이 최대 장애물임. 그동안 안보리 논의 자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해 왔던 중국은 지난달 하순부터 다소 태도를 바꿔 안보리 논의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임. 중국 측은 안보리의 천안함 관련 문안 협의 과정에서 북한의 공격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용어나 문구는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북한이 이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문안에 ‘북한’을 넣어서 비난한다거나, 공격(attack)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임. 중국 측은 ‘공격’ 대신 ‘사건(incident)’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G8(주요 8개국) 정상회의의 성명에서는 ‘공격’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었음.
-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어뢰 공격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도발행위이므로 북한의 책임임을 적시하고 이를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한·미·일과 북한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을 명시해선 안 된다는 중국간의 간극으로 인해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셈임.
- 유엔 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G8 성명이 안보리 대응 조치의 기준이 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데 대해 “G8과 안보리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특히 G8에 포함돼 있지 않은 중국이 안보리에서 사실상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만큼 논의가 쉽지 않다”고 말해 최종 안보리 문구가 G8 성명 보다 낮은 수위가 될 것임을 시사했음. 앞서 G8 정상들은 지난달 27일 ‘최근 한국 해군 장병 46명이 희생된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개탄하며 이에 대해 북한이 책임이 있다는 민·군 합조단 조사결과의 맥락에서 이를 야기한 공격을 비난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었음.

- 유엔 안팎에서는 북한측이 안보리의 대북 대응 조치를 막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필사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음. 신선호 대사가 지난달 중순 기자회견에서 안보리가 의장성명, 또는 결의를 채택할 경우 어떻게 할 지를 묻는 질문에 “안보리가 우리를 비난 하거나 우리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어떤 자료라도 배포한다면 우리 군이 나설 것”이라고 말한 것도 중국의 대응 기준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임. 즉 북한을 지목해 비난하거나 그 책임을 인정하는 문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임.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비난에 동조할 경우 북한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 유엔의 한 관계자는 1일 “현재 북한은 권력 이양기에 있어 김정일 체제가 강고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핵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상당히 상실한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국은 천안함 사건 자체 보다는 한반도 정세라는 틀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음. 다만 안보리에서의 대응 조치 논의를 무조건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일단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내리되,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순번제로 돌아가는 이번달 안보리 의장을 나이지리아의 조이 오구 대사가 맡게 되면서 천안함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됨. 유엔 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전임 의장국인 멕시코는 한국과 워낙 가까운데다 스스로 없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상대였지만, 나이지리아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안보리 의장국의 기본 임무가 균형잡힌 회의 진행 등 중립성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 위성락 “北책임 얼마나 물을지가 쟁점”(7/2)

-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진행 중인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논의의 쟁점은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로 지적할 수 있는지”라고 밝혔음. 미국을 방문하고 이날 오후 귀국한 위 본부장은 인천공항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같이 대답한 뒤 중국 입장의 변화 여부에 대해서는 “협약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음.



- 그는 “토론토는 G8(선진8개국).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때문에 갔고, 워싱턴 방문도 유엔에서 진행 중인 안보리 협의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G8 공동성명 문안 나오는 과정에 관여하는 등 협의를 통해 안보리 협의에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 위 본부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열린 G8.G20 정상회의를 수행한 뒤 같은 달 28일 미국으로 건너가 워싱턴과 뉴욕을 차례로 방문,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미 국무부와 국방부, 백악관의 핵심 당국자들과 학계 인사들을 만나 천안함 사태 대응방안과 북핵 6자회담 문제를 협의했음.

● 북, ‘천안함 공동조사 필요’ 안보리에 서한(7/1)

- 북한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30일(현지시간) 유엔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주재 북한 신선호 대사는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라우드 헬러 대사 앞으로 보낸 29일자 서한에서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검열단을 한국과 미국이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보리 이사국들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음. 또 검열단 활동을 통해 천안함 합동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검증하고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북한은 아울러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통해 천안함 사건이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이 회담에서 군사정전위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측은 이에 대응, 박인국 유엔주재 대사 명의로 역시 헬러 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천안함 침몰 사건은 지난 1953년 한국 전쟁을 끝내기 위해 체결된 정전협정 위반이며 따라서 이 문제는 군사정전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는 점을 재확인했음.
- 유엔 관련 외교 소식통은 “북측이 이처럼 군사회담을 열자거나 검열단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만간 나올 안보리의 조치를 연기해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면서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현재 상황을 명백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주재 한국 대표부는 이와 관련, 천안함 사건의 엄중성에 상응하는 조치를 다시 촉구하는 서한을 안보리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음.

● “美·日 등 대북 독자제재 36건”(7/1)

- 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EU)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1718호(2006년)와 1874호(2010년)에 의거, 지금까지 북한의 기업과 개인에 대해 가한 독자적인 제재건수가 36건에 달했음. 연합뉴스가 30일 유엔 안보리의 7인 전문가 패널이 최근 작성한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미국과 일본 등은 지난 4월 30일 현재 북한의 압록강개발은행 등 기업 19곳과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등 17명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음.



- 이들 북한의 기업과 개인들은 특정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았거나, 복수의 국가로부터 중복제재를 받은 경우를 모두 합친 것임. 이 중에는 이미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과 개인도 일부 포함돼 있음. 미국은 북한의 13개 기업과 4명의 개인에 대해 제재를 가했음. 기업 가운데는 압록강개발은행, 조선룡봉총회사와 연결고리를 지닌 코하스 AG(Kohas AG),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조선광선은행(KKBC), 조선부강무역회사 등이 포함돼 있음. 또 미국이 제재조치를 취한 개인은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 제이콥 스티거 코하스 AG 회장, 조선광업개발무역(KOMID)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해온 차이 알렉스(Tsai Alex) 부부 등 모두 4명임.
- 일본은 김정일 위원장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었던 봉화진료소, 평양정보과학센터, 조선종합장비수입회사 등 기업 12곳과 제이콥 스티거 회장 개인 1명에 대해 각각 제재를 취했음. 유럽연합(EU)은 북한내 실제로 꼽히는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해외에서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선진기술 획득을 지휘하고 있는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제재대상 명단에 올렸음. 특히 장성택과 관련해서는 2006년 현재 여권번호가 'PS 736420617'라는 점과 생년월일이 '1946년 2월 2일' '1946년 2월 6일' '1946년 2월23' 등 3가지가 있다고 소개, 신원확인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음.
- EU는 이와 함께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김동운 노동당 중앙위원회 '39호 실장', 전병호 노동당 군수비서, 영변 핵연료제조공장 책임자로 알려진 전치부, 주구창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현철해 국방위 국장 등 개인 1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음. EU는 또 조선부강석탄기계 회사, 영변핵연구센터 등 4곳의 기업과 기관에 대해 제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음.
- 호주는 북한의 9개 기업과 개인 1명에 대해 제재를 가했음. 안보리의 7인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앞으로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는 각국이 자체적으로 지정한 이들 기업과 개인들을 잠재적 제재대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음.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구성된 7인 전문가 패널은 대북 제재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각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위반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멀린 “핵확산방지 위한 대북압박 강화해야”(7/1)

-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지도자들은 정치, 외교,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음. 멀린 합참의장은 지난 28일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열린 안보포럼에 참석, 북한을 핵확산 우려국가 명단의 최상위에 올려놓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미 언론이 30일 전했다.
- 멀린 합참의장은 “(군수 및 민수 목적) 양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자를 확산시키는 북한의 위협이 단순히 사라지기만을 기대하고 있



을 순 없다”면서 “이런 종류의 확산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합참의장은 한반도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역내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자신을 점점 더 고립시키고 있으며, 현재 권력 승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예상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 열린 합참의장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인했지만,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돼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주도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中, 안보리 대응동의” G8문안보다는 약해질 듯(7/1)

- 중국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입장 발표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하지만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안보리가 채택할 문안은 지난주 G8(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서의 대북 비난성명보다 수위가 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을 방문중인 정부 고위 당국자는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천안함 논의 동향과 관련, “그동안의 협의를 통해 (안보리가 채택할) 문안들에 대한 의견 접근은 이뤄지고 있다”면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큰 쟁점들은 남아 있으며, 그것은 더 협의를 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중국의 입장과 관련, “중국도 유엔 안보리에서 입장을 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현재 문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G8 성명 문안 내용이 비교적 괜찮다”면서 “그것이 하나의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안보리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음.
- 그러나 그는 “포괄적으로 보면 G8 문구가 좋은 참고가 되겠지만, (성명 채택의) 구성이 다르고 논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문구가 똑같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안보리 문구는 G8보다 좀 더 ‘텔리케이트’ 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물을 섬세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G8성명 채택 당시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국이 안보리 이사국에 포함돼 있는 만큼, 안보리에서의 천안함 사건 관련 대북 비난성명 내용이 G8성명보다 약해질 수 있음을 시사함. 이 당국자는 안보리 대응이 의장성명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용을 위주로 보고 어떤 용기에 담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라고 말했고, 협의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대개 6~7월은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음.
- 그는 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안보리의 대북대응 이후 미국이 양자 차원에서 독단적인 대북제재 조치가 있을 것임을 확인하면서 “금융 및 여타 부문에서 검토가 진행중”이라고 추가적인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 방침 등을 전했다. 그는 미국이 마카오의 은행인 BDA(방코델타아시아)에서 북한 자금 2천400만달러를 과거 동결시켰던 것과 같은 방식의 제재를 검토중이라고 일부 일본 언론이 보도한데 대해



“조금 거리가 있다”면서 “특정 은행을 정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정황은 아닌 것 같다”고 부인했음.

- 이와 관련, 그는 “(북한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일반적 기준을 만드는 쪽이 아닌가 싶다”면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적을 수 있지만, 운영하기에 따라 임팩트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음. 이 밖에 그는 천안함 사건 국면이 마무리된 가을 이후 북핵 6자회담 재개 전망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평가를 할 것”이라면서 “안보리에서 (천안함과 관련해) 어떤 결과를 얻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음. 한편 한미 양국은 북한 내 최근 움직임이 권력승계와 관련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관련 정보 교환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中 ‘핵 억제력 강화’에 ‘비핵화’ 강조(6/29)

- 중국 정부는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북한의 발표에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음.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억제력 강화를 발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요구받고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 근본”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친 대변인은 또 한반도에 긴장 국면이 더 이상 조성돼서는 안 된다고 말해 북한의 발표에 우회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음.
- 그는 “시급한 과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국면을 변화시켜 더 이상 이를 격화시켜서는 안 되며 충돌 발생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각 당사국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천안함 사건을 포함한 현재의 당면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음.
- 그러면서 그는 “유관 당사국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유관 당사국의 공동된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음.
- 친 대변인은 “한반도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는 장기적인 관점과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28일 외무성 대변인이 기자와 문답하는 형식을 통해 미국 정부의 과거 핵무기사용 검토 사실을 거론하면서 “우리의 핵억제력을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北 “핵억제력,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강화”(6/28)

- 북한이 28일 미국 정부의 과거 핵무기사용 검토 사실을 거론하면서 “우리의 핵억제력을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1969년 북한의 미국 정찰기 격추사건 당시 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전술핵무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내용의 기밀문서가 공개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역사적 사실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길밖에 없다는 우리의 결단이 천만번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역대적으로 조선(북한)에 대해 ‘힘의 정책’을 추구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무기를 사용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면서 “지난 4월 ‘핵태세 검토보고서’(NPR)를 발표하면서 조선을 핵무기 불사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미국의 현 행정부도 조선에 대한 핵위협 정책에서는 전임자들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조지워싱턴대 부설 민간연구기관인 국립안보문서보관소(NSA)가 최근 공개한 기밀문서에 따르면 닉슨 행정부는 1969년 북한의 미 EC-121 정찰기 격추로 승무원 31명이 숨지는 사건이 터지자 향후 유사한 도발시 북한에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비상계획을 검토했음.

● <오바마 ‘직설 발언’ 천안함 외교 향배는>(6/28)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과 계속되는 문제들을 의도적으로 눈감는 것은 다르다”며 천안함 사태에 북한이 관여했다는 조사 결과를 수용할 것을 촉구해 향후 파장이 주목됨. 오바마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폐막한 G20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전날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천안함 사태에 북한이 관여했다는 조사 결과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소개했음.
- 특히 그는 자신의 발언이 “매우 직설적(very blunt)”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런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음. 외교가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음. 그만큼 미국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 중차대함을 그대로 보여줬다는게 대체적인 반응임.
-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일(천안함 사태)이 북한이 선을 넘은 사례라는 점을 후 주석이 인정하길 희망한다”거나 “미국은 천안함 조사에 참여했고, 우리 전문가들은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결론지었다”고 강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들은 전했다. 당국자들은 또 “우리의 주된 관심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도발행위에 연루됐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crystal clear acknowledgement)하는데 있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금주 안보리에서 본격 진행될 ‘천안함’ 협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음. 한 소식통은 28일 “이번 G8와 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천안함 사태에 북한이 책임이 있고 이는 비난받을 행동이라는 데 국제사회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G8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한국 해군 장병 46명이 희생된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개탄하며 북한이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민·군 합조단 조사결과의 맥락에서 이를 야기한 공격을 비난한다’는 내용을 담은 점이 더욱 시의성이 있다는 당국자들의 전언임. G8 공동성명은 상임



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뿐 아니라 러시아도 동의했기 때문에 향후 안보리에서 의장성명이나 결의안을 도출할 때 초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음.

- 그러나 러시아가 이번 성명에서 다른 7개국과 공통된 입장에 선 것은 G8 내에서의 위상 약화를 우려한 일종의 외교적 제스처일 뿐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바뀐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없지 않음. 또 G8에 사실상 대북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빠져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임.
- 외교소식통은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국의 동참을 강력 촉구한 만큼 안보리 논의 흐름이 주목된다”면서 “하지만 중국도 쉽게 기존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결국 절묘한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음.

● “G8성명, ‘안보리 초안’으로 활용 가능성”(6/28)

- G8(주요 8개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의 내용 중 북한을 비난하는 대목이 조만간 진행될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될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의장성명 또는 결의안 초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당국자는 28일 “G8 공동성명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동의한 내용”이라며 “향후 천안함 사태에 대한 안보리 조치의 초안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다른 당국자는 “G8 공동성명이 안보리 초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안보리의 협의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런 모멘텀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이번 주가 안보리의 천안함 대응에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G8 정상들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한국 해군 장병 46명이 희생된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개탄하며 북한이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민군 합조단 조사결과의 맥락에서 이를 야기한 공격을 비난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음.
- 정부는 앞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나 의장성명이 담아야 할 최소한의 내용으로 ▲북한 지목 ▲규탄·비난 ▲사과·보상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 5개 사항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음. 그러나 한 소식통은 “러시아의 동의는 G8 내에서의 위상 약화를 우려한 일종의 외교적 제스처일 뿐 이와 관련한 러시아의 입장은 그대로일 수 있다”며 “더군다나 안보리에서는 중국의 동의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나. 미·북 관계

● 美 “안보리서 의미있는 성명 기대”(7/2)

- 미국은 1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있는(significant) 성명이 도출



되기를 기대했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자신들의 도발적 행동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하는 의미있는 성명이 유엔 안보리에서 나오기를 원한다”고 밝혔음.

- 크롤리 차관보는 ‘지난주 채택된 G8(주요 8개국)에서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대북 비난성명 정도면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는 한국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G8 성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G8 성명에 추가해서 유엔에서 대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음. 그는 이어 “뉴욕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유엔 성명을 두고 관련국가들과의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 北조평통, 전작권 전환연기 비난(7/1)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일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3년7개월여 연기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위험천만한 현 사태를 더욱 극단으로 몰아가며 우리와의 전면전쟁도 불사하는 극히 엄중한 도발”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조평통은 이날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한 사실에 언급, “조선반도(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의 전쟁위험은 더욱 증대되게 되었다”고 말했음. 담화는 이어 “괴뢰군 함선침몰 사건이 일본의 후텐마 미군기지 이설요구를 둘러버리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노린 미국의 특대형 모략극이었다는 것을 여지없이 확증해 주고 있다”고 강변했음. 담화는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 ‘역도’, ‘패당’ 등 원색적 용어를 사용해 비난했음.

다. 중·북 관계

● “北, 中상인 첩보활동 감시 강화” < RFA >

- 북한 당국이 상거래로 위장한 중국인들의 첩보 활동을 막기 위해 중국 상인들에 대한 감시와 입국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밝혔음. 이같은 사실은 최근 간첩 혐의로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던 중국인 6명 가운데 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해져 주목됨. RFA는 무역 일을 하는 북한 주민의 말을 인용, “북한에 드나드는 중국 상인들 가운데 정보를 수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단서가 드러나, 중앙에서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면서 “중국 접경 지역의 보안부와 보위부 요원들이 중국 상인이 체류지로 신고한 북한내 친척집 등을 불시 방문해 조사하고, 부재중이면 즉시 행방을 추적한다”고 전했다.



- 방송은 또 “북한의 통행검사소는 중국 상인들한테서 사소한 혐의라도 잡으면 ‘까만 도장’을 찍어 곧바로 출국시킨다”면서 “이런 경우 다시는 북한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송은 이어 “최근 자강도 만포시에서 체포된 중국인들의 경우 군수산업 지역인 자강도 강계시를 오가다 첩보활동 혐의를 받았다”면서 “보위부는 이들 중국 상인의 소지품 가운데 소형녹음기가 내장된 MP3플레이어 등을 정탐행위의 증거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中 “천안함에 대한 입장 불변”(6/29)

- 중국은 29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중국이 북한의 행위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자국의 대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옹호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후 중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중국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 타당한 해결책을 찾고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관련 당사국들과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강 대변인은 중국은 천안함 사건의 진상에 시비곡절을 따져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어느 편도 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비난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중국은 불난 집에 부채질이나 도적질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에서 충돌을 방지하기위해 냉정하게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는 이날 사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무책임하고 경솔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 이 신문은 개회와 휴회를 반복하고 있는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저지른 행위와 저지르지 않은 행위에 대해 눈 감고 있는 쪽은 중국이 아니다”며 “중국 측 노력에 고의로 눈을 감고 있는 쪽은 바로 미국과 같은 지도자급 국가들”이라고 반박했다. 신문은 북한이 핵 계획을 포기하도록 하는 중국 측 노력 모두가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북한과 접촉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北 아리랑 공연에 ‘北中친선 장면’ 넣는다”(6/29)

- 오는 8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2개월여 동안 진행될 북한의 집단체조 공연 ‘아리랑’에 중국과의 친선을 강조하는 ‘북중친선 장면’이 새로 도입된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29일 전했다. 북한 ‘아리랑’ 공연 국가준비위원회의 김금룡 연출실장은 이 신문에 “2010년도판 아리랑 공연의 특징은 ‘친선 아리랑’이라는 장면이 새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는 조선전쟁(6.25전쟁) 발발 60주년이자 중국 인민지원군의 참전 60주년인 올해 북-중 친선에 관



한 김일성 주석의 고귀한 유산을 계승·발전시켜 나가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조선신보는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어느 때보다 긴장돼 있는 올해에도 연인원 10만명이 출연하는 성대한 평화대축전이 평양에서 진행된다”며 “현재 외국에서 많은 공연관람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 올해 아리랑 공연 연습은 예년처럼 4월1일에 시작됐고 막바지 단계인 7월초 시연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1시간20분 동안 진행되는 ‘아리랑’ 공연은 고 김일성 주석의 90회 생일을 맞았던 2002년 처음 열렸으며, 2005년 두번째 공연 이후에는 수해로 취소된 2006년을 제외하고 매년 열려 올해가 6회째임.

● “北대성무역, 금광 이익분배 안해 中투자자와 분쟁”(6/29)

-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무역총회사가 중국 사업자의 투자를 받아 금광을 개발하고도 이익금을 전혀 나눠주지 않아 분쟁에 휘말려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전했다. 북한의 노동당 39호실은 주요 금융기관인 대성은행, 고려은행 같은 핵심 기업들을 직접 운영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음. RFA는 단둥의 대북소식통을 인용, “중국 국적의 조선족 사업가가 북한 대성무역총회사와 평안북도 천마산의 금광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설비와 장비를 투자했다”면서 “그러나 투자가 모두 끝나고 금이 생산되는데도 중국 투자자에게 이익이 배분되지 않아 다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 중국측 투자자는 대성무역에 여러 차례 항의했는데도 ‘담당자가 바뀌어 모르겠다’는 답변만 되돌아오자 ‘해결사’를 동원해 단둥(丹東)에 들어온 대성무역 소유 화물트럭을 몇 대 강제 압류했고, 그 후 대성무역은 자사 화물차를 중국쪽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RFA는 설명했다. 이 방송은 “중국측 사업자가 천마산 금광 개발에 투자한 시점은 2005년경인데, 소문으로는 전체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단둥에서 대북 무역을 하는 조선족 사업가 정모씨는 “북한에 설비투자를 하고 투자금을 날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며, 빚을 받으러 북한에 들어갔다가 행방불명된 사람도 많다”고 RFA에 밝혔다.

● “中연변에 北요원 대거 투입, 탈북자 체포 혈안”(6/29)

-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해외 ‘반탐(방첩)요원’을 중국 연변(延邊) 지역에 대거 투입해 탈북자 체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대북 단파라디오 ‘자유북한방송’이 28일 전했다.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이 방송은 중국 선양(沈陽) 주재 통신원을 인용, “이달 초 북한 보위부가 반탐요원 100여명을 옌지(延吉)시에 보냈다”면서 “이들은 신분을 숨긴 채 시내 호텔 두 곳에 머물면서 연일 탈북자 검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은 이어 “전에는 옌지시 공안국에 8명 정도 북한



요원들이 상주했으나 지난 2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지금은 15명이 넘는다”면서 “작년 말 북중 양국의 공안당국자들이 국경 봉쇄와 탈북자 단속 강화에 합의함에 따라 북한 요원들이 대폭 증원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 한편 탈북자학술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지난 26일 북한 현지 통신원을 인용, “최근 북한 보위부가 탈북자를 돕고 한국 물품을 조달한 혐의로 조사한 중국인 6명 중 5명은 중국 현지에서 납치해온 사람들”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중국인 2명은 지린(吉林)성 통화(通化) 출신이고, 옌지 출신 2명은 아직 조사를 받고 있으며 다른 2명은 풀려났다”고 전했다.

라. 일·북 관계

● 日, 北 화물검사 특조법 4일 시행(7/2)

- 일본에서 북한 관련 선박을 대상으로 한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다.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은 북한에 출입하는 선박에 핵이나 미사일 관련 물자 등이 선적됐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 공해상을 항해중인 외국 선박이라도 선적국의 동의아래 화물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특별조치법은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조치에 따라 지난 5월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 한편 일본 제7관구 해상보안본부(기타 규슈 소재)는 2일 간문(關門) 해협 동쪽 해역에서 북한 관련 선박의 출현을 상정한 합동 훈련을 실시함. 이날 훈련은 북한 관련 화물을 적재한 외국 국적의 화물선을 공해상에서 발견해, 강제로 배를 세운뒤, 해상보안 요원이 화물을 조사해 컨테이너 안에서 로켓 부품 등을 찾아내는 가상 훈련임.

● <‘독도영유권 주장’ 日보수파와 北민주화운동?>(6/28)

- 중군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하고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보수세력과 연대하는 문제를 놓고, 북한 민주화운동을 벌이는 국내 보수단체들이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음. 발단은 지난 23일 국민행동본부(서정갑 본부장) 등 일부 보수단체들이 일본의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약칭 ‘구하는 모임’)와 함께 강원도 철원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이었음. 이 행사에 불참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남북자가족모임 등 다른 보수단체들은 ‘구하는 모임’의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임.
-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는 28일 강남구 역삼동 국민행동본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일본 단체와의 관계 단절을 요구하기도 했음. 연대에 반대하는 이들 단체는 무엇보다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구하는 모임’ 회장의 이념적 성향과 과거 활동을 문제 삼고 있음. 니시오카 회장이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을 주도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약칭 '새역모')을 적극 지원해온 일본의 대표적 보수논객이어서, 그가 이끄는 단체와 연대하는 것 자체가 온당치 못하다는 것임.

- 도쿄기독교대 교수이기도 한 니시오카 회장은 야기 히데츠구(八木 秀次) 다카사키 경제대학 교수 등과 함께 2006년 출범한 아베 신조(安倍晋二) 정권에 집권 이데올로기를 제공한 '5인 그룹'의 구성원으로 알려졌다. 납북자가족모임의 최성용 대표는 "니시오카 회장은 일본 극우세력의 막대한 자금력을 등에 업고 국내 친일세력 만들기에 앞장서온 인물"이라며 "우리 보수단체들이 일본 측의 의도와 연대활동의 결과 등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이런 입장과는 반대로, 국내 일부 보수단체들은 북한 민주화나 납치문제 같은 '공통 관심사'를 고리로 삼아 일본 보수단체와의 연대를 적극 시도하고 있으며, 심지어 한 대북방송은 '구하는 모임'으로부터 적지 않은 후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은 "우리는 니시오카씨가 일본인 납북자 구하기 모임 회장이라는 것 말고는 모른다"면서 "김정일 정권을 응징하는 데 참여하기 위해 멀리 외국에서 온 것을 높게 평가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음.

마. 기 타

● 힐 前 6자회담 美대표, 덴버대 학장 된다(7/2)

-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로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10.3합의 등을 이끌었던 크리스토퍼 힐 주 이라크 대사가 오는 9월 미국 덴버 대학교의 '조지프 코벨 국제관계대학' 학장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전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제임스 제프리 주 터키 대사를 힐의 후임자로 지명했음.
- 로버트 쿼 덴버대 총장은 "9월 가을학기부터 힐 대사가 우리 대학교의 국제관계대학 책임자로 일하게 됐다"며 "30년 직업외교관 경력을 통해 쌓은 풍부한 경험과 많은 업적이 인선의 배경"이라고 RFA에 말했다. RFA는 "(힐 대사가 학장을 맡을) 국제관계대학은 1964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의 아버지 조지프 코벨에 의해 설립됐으며, 전세계 외교 분야 대학 순위에서 20위권에 드는 명문"이라고 소개했음.

● <각국이 정한 대북 수출금지 사치품은>(7/2)

- "순혈종마, 캐비아, 바닷가재, 모피, 랩톱, 고급 피아노..."는 미국과 EU(유럽연합) 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맞춰 자체적으로 대북 수출금지 품목으로 정해놓은 사치품 명단의 일부임. 유엔 안보리의 7인 전문가 패널이 최근 작성한



대북제재 이행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지난 4월 30일 현재 식품, 주류, 화장품 및 패션 액세서리, 의류, 보석류, 전자제품, 약기류, 운송수단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수출금지 사치품 목록을 작성,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음.

- 이 보고서는 안보리 회원국들이 제출한 신고서를 토대로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뉴질랜드, 한국, 러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음. 북한과 가장 많은 교역을 하고 있는 중국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음.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살아있는 동물 가운데 ‘순혈종마(pure-bred horses)’의 수출을 금지했음. EU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좋아한다는 캐비아(철갑상어알)와 송로버섯, 고급와인도 명단에 올렸음. 또 회원국들은 자국의 특산물로 여겨지는 식품류의 수출을 막았음.
- 일본은 쇠고기와 참치, 호주는 바닷가재 등 갑각류, 뉴질랜드는 벌꿀, 러시아는 코냑, 미국은 와인과 맥주 등의 수출길을 봉쇄했음. 담배(시가 포함), 향수, 디자이너 제작의류 등은 명단에 소개된 거의 모든 회원국들이 수출금지 품목으로 정해났음. 미국의 경우, 이외에도 쌍안경과 카메라 케이스, 핸드백, 실크 스카프 등을 금지품목에 보탤음. 미국은 보석류에 대해 금, 은,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등을 금지품목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했으며, 전자제품과 관련해서도 평면TV, 플라즈마 혹은 LCD TV, DVD 플레이어, PDA, 개인용 디지털뮤직플레이어, 랩톱 등을 수출할 수 없다고 못박았음. 만년필과 카펫, 예술품, 100년 이상된 앤티크, 희귀 동전, 우표 등도 미국을 비롯한 여러나라들이 수출할 수 없는 사치품의 범주에 포함시켰음.
- 요트와 고급 피아노도 금지품목에 들어갔음.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 패널은 현장조사 차원에서 최근 오스트리아를 방문했을 때 오스트리아 세관당국으로부터 지난 2007년 12월 스타인웨이 연주용 피아노(16만2천 유로 상당)를 빈 공항에서 압수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음. 이들 피아노는 북한의 현지 공관이 평양에 보내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음. 또 2009년에는 북한이 구매하려던 호화 요트 2척(1천300만 유로 상당)을 이탈리아 세관측이 적발하기도 했음.
- 유엔 패널은 보고서에서 지난 2006년 대북결의 1718호 채택 이후 안보리 회원국들로부터 사치품에 대한 명확한 범주를 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그 범주는 회원국의 책임 하에 결정되 북한 일반 주민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안보리는 대북 결의를 채택하면서 북한 주민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물품이 북한의 고위층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치품 수출금지 조항을 넣고, 회원국들의 이행을 독려하고 있음.



● “탈북자 美 ‘난민’ 입국, 평균 1년 걸려” <RFA>(6/29)

- 탈북자가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가려면 평균 1년 가까이 걸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했음. 이 방송은 미 의회 회계감사국(GAO)의 ‘탈북자 미국 정착에 관한 보고서’를 인용, “탈북자들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들어 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006년 평균 133일에서 2007년에 399일로 3배가 됐다가 2008년에는 다시 314일로 조금 짧아졌다”고 밝혔음. 미국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10월1일부터 해당 연도 9월30일까지를 말함. 탈북자가 미국의 ‘난민’ 지위를 받는 기간이 급격히 길어진 이유는,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는 제3국의 비협조와 보통 2~3개월 걸리는 미국의 신원조회 때문이라고 RFA는 설명했다.
- RFA는 이어 “2004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모두 238명의 탈북자가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해 이 가운데 42%인 99명만 난민 지위를 받았으며, 연도별로는 2006년 9명, 2007년 22명, 2009년 25명, 2010년(4월 현재) 6명”이라고 말했음. 같은 기간 탈북자 107명이 난민 신청을 자진 취소했고, 신청자 가운데 18명은 미국 정부에 의해 입국이 거부됐다고 RFA는 덧붙였다. 다른 나라의 예로 영국이 2006~2009년 4년간 탈북자 665명의 신청을 받아 350명을 받아들였고, 독일은 2000~2009년 10년간 329명 중 191명, 캐나다는 같은 기간 217명 중 76명의 입국을 허용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 中美 7개국 “천안함 대응 한국과 적극 협력”(6/30)

- 파나마 한·SICA(중미통합체제) 정상회의에 참석한 중미 7개국 정상들은 29일 이명박 대통령과 회동을 갖고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동시에 한국의 사태 대응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의 특별선언문을 발표했다. 특별선언문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대통령과 정상 대신 참석한 도미니카공화국 부통령, 벨리즈 고위 대표가 천안함 침몰로 인한 46명 장병의 희생에 애도를 표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행위를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았음. 또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하고 천안함 사태가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존중하는 가운데 해결돼야 한다는 인식 아래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오바마, 한미FTA로 ‘일석삼조’ 노려” <WSJ>(7/1)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의



회 비준동의안 처리방침을 밝힌 것은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일석 삼조’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음.

-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유명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위셀은 1일자 칼럼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몇주전 램 이매뉴얼 비서실장과 한미 FTA 논의 재개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했음. 당시 대화에서 이매뉴얼 실장은 한미 FTA가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바라고 있던 세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함.
- 오바마 대통령의 세가지 ‘희망사항’은 천안함 사태 이후 한국을 지원할 방안을 찾는 것과 함께 미국의 수출을 늘리면서 동시에 아시아와의 경제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위셀은 설명했다. 물론 의회에서 비준 동의를 얻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한국이 14위 경제강국인 동시에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게 두 사람의 ‘셈법’이라는 것임. 특히 위셀은 오바마 대통령이 자동차 및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압박을 가할 것이며, 만약 성공한다면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 타결되었던 협상보다 좋은 조건을 얻어냈다는 점을 자랑할 것으로 내다봤음.
- 위셀은 오바마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한미 FTA 재논의 이슈를 끄집어낸 것은 최근 그가 보여준 자유무역 드라이브의 한 사례라고 진단했음. 최근 러시아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를 언급하며 미국산 닭고기 수입 재개를 관철시킨 것이나 G20 정상회의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도하 협상에 대해 논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임.
- 특히 과거 자유무역을 강조해온 미국이 최근 경제불황에 따른 일자리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유무역으로 인해 자칫 중국에 부(富)를 빼앗길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자유무역 회귀’ 움직임은 주목할 만 하다고 위셀은 설명했다. 위셀은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통상전략은 중국에 대해 더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닌 경제대국으로서 역할을 촉구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자신이 국제무대에서 강력한 협상을 하고 있음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음.

● “美, FTA논의 車·쇠고기 국한 시사”(7/1)

-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준비하기 위해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 접근에 초점을 맞춘 ‘한정된 변화들(narrow changes)’을 추구할 의도임을 밝혔다고 미국의 통상전문지 ‘월드트레이드 온라인’이 30일 보도했음. 이 잡지는 이날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미 정부 당국자들이 이번주 초 업계와 의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신호를 보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잡지는 미 정부 당국자들이 한미 FTA 투자조항 변경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 애덤 스미스(민주.워싱턴) 하원의원은 미 정부가 미해결 문제들에 “좁게 초점을 맞춰” 해결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잡



지는 또 미 정부 당국자들이 변화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형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는 뜻을 전달했다면서 변경되는 내용이 부속 합의 등에 반영될 여지를 열어줬다고 전했다. 잡지는 민간분야 소식통의 말을 인용,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가 한국 측과 어떤 식으로 협의할지 등을 결정하기까지는 1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릴 것이라면서 “모든 것이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 <美하원 한미FTA워킹그룹 출범 “비준지원” 다짐>(7/1)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촉진하고 홍보하기 위해 미국 하원 의원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30일 출범했다. 데이브 라이커트(공화.워싱턴), 애덤 스미스(민주.워싱턴) 의원을 비롯한 미 하원의원 6명은 이날 미 의회에서 한미 FTA 워킹그룹 출범식을 갖고 미 의회에서의 원활한 FTA 비준안 통과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짐했다.
- 라이커트 의원은 워킹그룹 출범식을 겸한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FTA 논의 재개 지시를 환영하면서 “한미 FTA를 통과시키는 것은 미국 내에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면서 “서로 다른 지역과 배경을 가진 초당적인 워킹그룹 의원들은 한미 FTA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비준 표결에 필요한 일을 함께 준비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보비 브라이트(민주.앨라배마) 의원도 “몽고메리 시장으로서 현대자동차의 앨라배마 유치를 도왔고, 그 이득은 엄청 컸다”면서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들에도 앨라배마에서 이미 목격한 이득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한미 FTA가 미국에 가져다 줄 이익을 강조했다. 또 에릭 폴슨(공화.미네소타) 의원은 “행동을 할 시간은 지금”이라면서 “이 협정을 비준하기 위해 의회의 동료들과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 피터 로스کم(공화.일리노이) 의원도 “오늘 날 파당적인 정치가 미국 국민에게 최고가 될 정책을 추진하는 데 너무 자주 개입하고 있다”면서 “한미 FTA 워킹그룹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고 세계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공화당을 함께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덤 스미스 의원은 “행정부와 협력하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이 워킹그룹을 비롯한 모든 동료의원들이 현안을 해결하고 의회에서 FTA 검토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다이앤 왓슨(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한미 FTA가 동맹 강화는 물론 실질적인 시장에서의 이득을 가져올 것이며, 한미 양국간의 교역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한덕수 주미대사는 “이 협정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때문에 양국 대통령이 우려에 대해 논의를 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



주, 공화 양당 각 3명의 의원으로 출범한 워킹그룹은 앞으로 한미 FTA 비준 촉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임.

● <美, '전작권-FTA' 한국내 논란에 '당혹'>(7/1)

- 한미간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간의 '정치적 거래' 의혹이 한국 내에서 제기되는데 대해 미국 측이 당혹과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방문중인 정부 고위 당국자는 30일 방미 기간 만난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의 면담 뒷얘기를 전하면서 "한국에서 전작권과 FTA 사이에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대해 이곳 사람들은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며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내의 그런 현상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논의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보였다"면서 "자기들도 동맹이라서 한국을 오랫동안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한국 사회의 논의 방향을 특별히 헤아릴 길이 없다'고 말하더라"고 밝혔다.
- 그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한국에서 그런 논란이 일어나는데 대해 미국 사람들이 당혹해 하는 것"이라고 한미정상회담 합의와 관련한 한국 내 논란을 바라보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시각을 전했다. 특히 이런 불만 섞인 반응을 미국 당국자들이 먼저 꺼냈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 <한미클럽 세미나, 남북·한미관계 제안 '붓물'>(6/29)

-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워싱턴 D.C. 소재 아메리칸대학에서 한미클럽(회장 봉두완)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한미관계를 진단하고 동맹 강화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 워싱턴특파원 출신 전·현직 언론인을 주축으로 한 한미클럽이 아메리칸대 국제대학원(학장 루이스 굿맨)과 공동으로 이명박 정부의 한미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우선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논의 재개 등의 성과를 낸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간의 토론토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 평가했다. 김창기 조선뉴스프레스 사장은 주제발표에서 "FTA 비준과 전작권 반환 두 문제 모두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타결되었거나 그럴 전망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김 사장은 이어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과 관련,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무시 대북정책은 사실은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의 다른 표현일지도 모른다"면서 "세계적으로 봉쇄 정책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못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제한적인 관계유지 정책(limited engagement policy)이 대안으로 필요하다"면서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말고, 제한적인 대화와 교류, 제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과 경제개발로 나서는 소프트트랙 대신 6자회담을 거부하고 핵을 고수하면서 벼랑 끝 전술로 가는 하드트랙을 선택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재검토를 촉구했음. 김 위원은 “한국과 미국이 교류와 지원을 끊어도 북한에게는 중국이라는 인공호흡기가 있다”면서 “6자회담에 대한 환상을 깨야 한다”고 말했음.
- 그는 또 북한 김정은에 대한 권력세습 여부와 관련, “상식과 순리로 생각해 볼 때 봉건왕조도 아니고 현대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면서 “북한의 급변사태라는 사물도 많은 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음.
- 봉두완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 국민은 자유와 독립을 지키고 지역과 세계에서의 평화와 상호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자신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미국 국민으로부터 배웠다”면서 한미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의 중요성을 제기했음. 이날 미국측 패넬로 참석한 에이브래햄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부소장은 “한미 양국관계가 전에 없이 강력하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한국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태도 변화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환경의 급변 등을 그 이유로 꼽았음. 또 봉영식 아메리칸대 교수는 한미 양국의 바람직한 동맹 강화 방향과 관련, “관계증진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 모두 특정하고 독특한 환경이 아닌 좀 더 보편적인 맥락에서 양자 관계의 기반을 놓아야 한다”고 조언했음.

● 미국방부 “한미 연합훈련 7월 실시”(6/29)

- 미국 국방부는 28일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따른 대응조치로 검토돼 왔던 서해상에서의 한미 연합훈련이 7월 실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 브라이언 화이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양국간에 훈련의 세부사항과 관련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한·미 양국은 애초 6월에 서해상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가 진행되면서 훈련 일정이 연기됐음.
- 앞서 한국군 관계자도 “서해상에서 이달 하순 실시할 계획이었던 연합훈련이 훈련 일정을 정하지 못해 7월로 넘어가게 됐다”면서 “미국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함대의 전력을 이동시키는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못해 훈련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음. 연합훈련에는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9만7천t급)와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강습상륙함을 비롯한 한국형 구축함(4천500t급. KDX-II)과 1천800t급 잠수함인 손원일함, F-15K 전투기 등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나. 한·중 관계

● 中 “한·중 FTA 협상 내년 시작”(7/1)

- “양국간 시점 합의는 없어 중국 정부의 고위 관리가 한·중 자유무역 협정(FTA) 협상이 내년에 시작될 것”이란 계획을 밝혔음. 1일 중국 인터넷 사이트인 중금재선(中金在線)에 따르면 장펑웨이(姜增偉)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충칭(重慶)에서 열린 양안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중 FTA 협상을 내년에 공식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 중국 측은 그동안 한중 FTA 협상을 조속히 시작하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구체적인 협상 시작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왔음. 그러나 이번 발언은 한국 측과 협의를 통해 협상시기를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임.
-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최근 양국이 산관학 공동연구의 종료를 공식 선언했지만 협상시작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한 것이 없다”면서 “이 발언은 중국 측의 희망 또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30일 상하이(上海)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 추진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이룬 시일 내 마무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 정부는 지난달 28일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산관학 공동연구의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음. 다만 양국 정부는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각자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음.

● <‘차이완시대’, 한국경제 파장과 대응은>(6/29)

-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로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음. ECFA는 사실상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를 통해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치·군사적으로 대립·갈등하는 시대를 마무리 짓고 인구 14억명, 국내총생산(GDP) 5조3천억달러(약6천400조원)에 이르는 경제공동체인 ‘차이완(China + Taiwan)시대’를 열게 된 것임.
- 이번 ECFA 체결을 ‘경제판 국공합작’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임. 동아시아에서 거대한 시장 ‘차이완’의 출범은 한국으로선 환영보다는 걱정과 우려의 대상이자 새로운 도전으로 부각되고 있음. 대만이 ECFA를 통해 중국과의 교역에서 관세 등 각종 특혜를 누리게 됨으로써 경쟁자인 한국은 그만큼 불리한 입장에서 중국시장을 공략해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임.



◇ 대만 제품, 중국시장에서 한국보다 우월적 지위 차지

- ECFA가 공식 발효되면 향후 2년간 대만은 539개, 중국은 267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됨. 무관세 품목이 대만이 두배로 많음. ECFA의 혜택이 대만쪽에 확연히 치우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음.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대만이 앞으로 무관세로 중국과 교역하게 되는 539개 품목의 지난해 중국 수출액은 138억 3천만달러로 대만은 무관세가 적용되면 13억달러의 관세를 절약하는 효과를 얻게 됨. 비용절감이 가능해진 만큼 대만의 539개 품목은 중국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됨.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 및 교역 특성상 대만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이 대중(對中) 투자 및 수출에서 타격을 받게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감추지 못하고 있음.
- 2009년 한국의 대(對)중국 교역규모는 총 1천409억달러였고 325억 달러의 흑자를 냈음. 한국은 최근 몇년 동안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한 중국시장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남겨왔음. 하지만 ECFA가 발효되면 한국 제품들은 중국시장의 상당 부분을 대만에 내줘야 하는 '비상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이 중국 수입시장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각각 10.2%와 8.6%로 2005년 이후 한국이 대만에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음. 2009년을 기준으로 한국과 대만의 중국 수출 상위 20개 품목 중 중복되는 품목이 전자집적회로, 액정 디바이스 등 14개에 달할 정도로 한국과 대만은 대중(對中) 교역에 있어서 유사성을 갖음.
- 양측은 특히 유기화합물, 플라스틱제품 등 석유화학과 전자집적회로, LCD 등 전기전자 및 기계산업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음. KIEP의 배승빈 연구원은 "ECFA가 발효되면 조기자유화대상 품목인 기계, 석유화학, 방직, 전자, 자동차 등 5대 산업품목에서 대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가격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음. 단적인 예로 현재 중국은 한국과 대만의 플라스틱류 제품에 6~12%, 유기화합물은 6.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ECFA가 발표되면 한국산에 대한 관세는 유지되지만 대만산은 관세를 면제받게 돼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갖게 됨.
- 특히 한국은 이들 14개 품목이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0%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일각에선 그러나 ECFA가 우려스럽긴 하지만 한국과 대만의 경제구조 특성상 핵심상품에 있어선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음.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ECFA가 발효되면 1차적으로 교역비용이 줄어들어 대만이 한국보다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이고, 한국은 대기업 중심이라는 점에서 핵심상품의 경우 기술개발과 비용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면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음.



◇ 한·중, 한·중·일 FTA 조기 체결이 대안될까

- 중국과 대만간 ECFA 체결로 대만산 제품들이 중국시장에서 특혜적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일각에선 한국도 한·중 및 한·중·일 FTA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대만산 제품들이 무관세를 통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국시장을 선점하기 전에 한국도 ECFA와 대등한 FTA를 조속히 맺어 한국산 제품들도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하지만 한·중 FTA는 물론 한·중·일 FTA는 아직 갈 길이 멀.
- 한국과 중국은 지난 5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에 대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종료했으며 다음 단계로 FTA 협상을 출범하기 전에 민감성 분야 처리방안에 대해 정부간 사전협의를 추진키로 한 상황임. 지금까지 논의는 원론적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탐색전을 앞두고 있는 정도임. 뿐만 아니라 한·중 FTA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둘러싸고 국내에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 농업분야에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을 우려하며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음. 제조업 분야에서도 업종에 따라 찬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음. 석유화학·자동차·전자·철강·전문기계 등 지금까지 중국시장에서 대외적인 경쟁력을 입증한 업종에선 한·중 FTA에 대해 반색하고 있지만 섬유 의류 생활용품 등 노동집약적 업종의 경우 우려와 경계가 더 심함. 한·중·일 FTA는 이제 산·관·학 공동연구에 착수키로 합의한 정도로 아직 첫걸음도 제대로 내딛지 못한 상황임.
- 더욱이 3국이 서로 목표로 하는 FTA의 수준도 달라 공식 협상에 착수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음.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총교역액 중 FTA 특혜교역비중을 80% 이상으로 증대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우선은 한미, 한·EU(유럽연합) 발효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한·중, 한·중·일 FTA는 초기단계인 만큼 타당성과 이해득실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다. 한·일 관계

● 조총련 중앙본부 토지·건물 압류될 듯(6/29)

- 일본 법원이 조선총련(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에 거액의 채권이 있는 정리회수기구에 대해 조선총련의 중앙본부 건물을 압류할 수 있다고 판결했음. 29일 교도통신과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정리회수기구가 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을 차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시설이 실질적으로 조선총련의 자산임이 인정된다면 압류할 수 있다”고 판결했음.
- 정리회수기구는 조선총련에 627억엔(약 8천600억원)을 대출한 조은신용조합(朝銀信用組合)이 파산하자, 이 채권을 인계받아 도쿄 시내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조선총련 중앙본부의 토지와 건물을 경매에 부쳐 대출금을 회수할 방침이었음. 하지만 조선총련 중앙본부 토지와 건물은 조선총련과는 별도의 회사인 조선중앙회관관리회(합자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 정리회수기구는 압류를 위해 필요한 수속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음.

-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대출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조선총련과 별도의 회사에 대해 압류를 할 수는 없다고 기각했지만 “명이가 달라도 시설이 실질적으로 조선총련의 자산임을 인정하는 법원 결정이 있다면 압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음.
- 이에 대해 정리회수기구는 조선총련 중앙본부 토지와 건물이 실질적으로 조선총련의 자산임을 인정해 달라는 별도의 소송을 냈고, 최고재판소는 1심에서 이를 인정했음. 이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리회수기구는 조선총련의 중앙본부 토지와 건물을 압류할 수 있게 됨.

라. 미·중 관계

● <中 ‘美항모 출항대기’ 예의주시>(7/2)

- 중국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할 미군 항공모함이 일본 기지에서 출항 대기 중이란 보도가 나오는 등 중국이 서해상에서의 한·미 연합훈련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중국의 언론사이트인 신민망(新民網)은 4일 한·미 양국의 서해상에서의 군사훈련이 임박한 가운데 항모 조지 워싱턴호가 일본 미군 기지에서 출항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했음.
- 이 사이트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인용, 미국의 핵 항모인 조지 워싱턴호가 전날 모항(母港)인 일본의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横須賀)항으로 되돌아갔다고 원래 6월 14일 요코스카를 출발해 수개월간의 장기 항해를 할 예정이었던 이 항모는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 모항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미군 관계자가 서해상에서 열리는 한·미 해군의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조만간 다시 출항할 것이라는 점도 부각시켰음.
- 중국 정부는 한미 합동 해상군사훈련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음.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마샤오펜(馬曉天) 부총참모장은 1일 홍콩 봉황 위성TV와 인터뷰에서 “한·미가 중국과 인접한 황해(서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려는 데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달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사실상 우려를 표명했으며 관영 언론들도 서해 군사훈련에 대한 불만을 수차례 표출해 왔음.
-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신민망의 이번 보도는 미국이 서해 인근 일본 기지에 항모를 대기시켰다는 것에 대해 중국정부가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짐작케 함. 신민망은 또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초 남중국해가 자국의 주권 및 영토보전과 관련된 핵심이해 사안이란 점을 미국 측에 공식 통보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사이트는 일본 언론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이는 중국이 해양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강렬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 中해방군 “韓·美서해훈련 반대”(7/2)

- 중국 인민해방군은 1일 한국과 미국이 서해(중국명 황해)에서 실시하려는 합동 해상군사훈련 계획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마샤오펜(馬曉天) 부총참모장은 이날 홍콩의 케이블 TV 봉황위시(鳳凰衛視)와의 인터뷰에서 한·미가 중국과 인접한 황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려는 데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관영 매체들의 보도를 통해 한·미 서해 군사훈련 계획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지만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임.
- 마샤오펜 부총참모장은 중국은 이번 한·미훈련이 중국 영해 부근에서 벌어질 계획이기 때문에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전달 경로와 한·미 양국에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 한·미가 당초 지난 6월말 실시하려는 서해 합동군사훈련을 7월로 연기하고 훈련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은 중국이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서방언론들에 나돌고 있음. 한편 마샤오펜 부총참모장은 이날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의 방중을 환영하겠다고 밝혀 게이츠 장관의 방중에 대한 중국 입장의 변화를 알렸음. 중국군 당국은 지난달 초 베이징을 방문하겠다는 게이츠 장관의 의사를 거부해 미·중 군사관계의 갈등을 시사했음.

● “美의 대만무기판매, 中로비로 지연”(7/1)

-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가 중국의 로비로 지연되고 있다고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미국의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를 인용해 1일 보도했음. 디펜스 뉴스는 최신판에서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무기판매가 보류될 것”이라는 미국-대만 비즈니스위원회의 루퍼트 하몬드-체임버스 회장의 발언을 전했다. 하몬드-체임버스 회장은 “대만은 F-16 A/B 전투기의 업그레이드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면서 “대만은 미국에 66대의 F-16 C/D 전투기를 요청했으나 지난 2006년부터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디펜스 뉴스는 워싱턴의 한 군사 애널리스트를 인용해 “중국이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와 관련해) 압력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관리들은 미국이 대만에 신형 F-16 전투기들을 판매하는 것은 일종의 ‘레드 라인’ 침범으로 간주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미국이 이를 실행할 경우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하몬드-체임버스 회장은 “미국은



(중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면서 “대만에의 무기판매가 올해에는 ‘동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초 미 국방부가 대만에 60억달러 이상의 무기판매를 결정한데 대해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 교류 중단으로 맞서고 있으며 이달 초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방중 요청을 거부하는 등 미-중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

- 칭화(淸華)대 중미관계연구소의 쑨 저(孫哲) 소장은 “미국과 대만 모두 무기 판매와 구매 의지를 접지 않고 있다”면서 “하몬드-체임버스 회장은 미국 무기 딜러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의 말은 미 정부에게 (조속히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라는) 압력으로 들린다”고 지적했음. 쑨 소장은 이어 “(무기판매를 막기위해) 중국은 더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美행정부, 광섬유업체 중국 합작계획 막아”(7/1)

-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국가안보상 우려를 들어미국 광섬유 생산업체와 중국 투자회사의 합작 계획을 철회하도록 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지가 1일 보도했음. 이번 결정은 최근 1년이 안 되는 기간 미 정부가 안보상 우려로 인해 중국 기업 관련 거래를 가로막은 두 번째 사례임. FT에 따르면 광섬유와 태양전지판용 부품을 생산하는 뉴멕시코 소재 업체 엠코어(Emcore)사는 중국의 탕산카오페이디안 투자회사(唐山曹妃甸投資集團, TCIC)에 광섬유 부문의 지분 60%를 2천780만달러에 매각하는 등의 합작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범정부적 외국투자 안보 문제 심의 기구인 재무부 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규제 관련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자 엠코어는 최근 자발적으로 합작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다른 방식의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음. CFIUS는 해외 자본의 미국 내 기업 투자와 관련해 국가안보 관련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이를 해당 업체에 전달해 자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함.

● <천안함 사건으로 미·중 긴장 고조>(6/30)

- 천안함 침몰 사건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 “최근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통해 양측의 오랜 경제적 갈등이 완화됐지만 천안함 사건으로 군사·외교적 긴장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했음.
- 지난 2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폐막한 G20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전날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 언급, “이번 일(천안함 사태)이 북한이 선을 넘은 사례라는 점을 후 주석이 인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그는 중국이 이 사건에 대해 당사국들의 ‘자제’를 강조한 것에 대해 “자제와 의도적인 눈감기는 차이가 있다”며 중국측의 태도를 비판했음.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친강(秦剛) 대변인은 다음날 정례 브리



평에서 “우리는 어느 편도 들고 있지 않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비난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친 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느낌을 갖고 있다”면서 “수천마일 떨어진 미국의 느낌과는 달리 우리는 더 직접적이고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음.

-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 양국이 내달중 합동 해상 훈련을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미·중 양측이 이 지역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음.
- 미국은 “이번 훈련이 중국을 위협하거나 이 지역에 불안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침략을 저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중국측은 자국의 앞마당에서 펼쳐지는 이 훈련에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함. 중국 당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중국군이 동중국해에서의 군사 훈련을 예년보다 앞당겨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것도 한·미 군사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실제로 미국내에서도 한·미 합동 해상 훈련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우회적 존재감 과시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음. 조지타운대의 낸시 베른코프 터커 교수는 “경제적 어려움과 아프간전의 차질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세계에, 특히 중국에 미국이 태평양 지역의 능동적이고 헌신적인 당사국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중국 런민대의 국제관계전문가인 시인홍 교수는 “이 훈련은 중국 정부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다”며 “미국은 중국을 신흥 강대국으로 대접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건을 논의중인 유엔 안보리에서도 한·미·일과 중국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되고 있음. 상임이사국으로 비토권을 갖고 있는 중국은 이들 3국의 강력한 대북 비난성명이나 결의채택을 막고 있는 상황임.

마. 미·러 관계

● 美대사관, 러시아 스파이 신병확보설 부인(7/3)

- 주키프로스 미국대사관은 미국 내 러시아 스파이 혐의로 키프로스에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종적을 감춘 러시아 정보요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음. 주키프로스 미 대사관의 제임스 엘릭슨 대변인은 2일 AP 통신에 러시아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는 크리스토퍼 로버트 멧소스(54)가 주키프로스 미 대사관에 있지 않으며 미 사법당국은 그의 소재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밝혔음.
- 제임스 대변인은 현재 그에 대한 추적은 전적으로 키프로스 당국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미 대사관 측은 키프로스 당국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7일 키프로스에 입국한 멧소스는 지난달 29일 키프로스 라르나차 공항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행 여객



기를 타려다 인터폴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키프로스 경찰에 검거됐음.

- 그러나 키프로스 법원이 법정 재출두를 조건으로 보석금 2만유로에 풀어주자 그대로 잠적했음. 키프로스 경찰 미카일리스 카트소노토스는 항구, 공항 등을 샅샅이 추적하고 있지만, 그가 터키계 북키프로스도 도주했다는 “뚜렷한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음. 그러나 루카스 루카 키프로스 법무장관은 이날 AFP 통신에 “그가 (남)키프로스에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몇 가지 징후들에 비춰볼 때 그렇게 생각된다”고 밝혔음. 남키프로스도 불리는 그리스계 키프로스는 국제사회에서 키프로스 섬 내 유일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터키계 북키프로스는 터키를 제외한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범죄자 송환에 관한 국가 간 협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따라 키프로스 정부는 멧소스가 잠적하자 그가 터키계 북키프로스도 달아났을 가능성에 주목했음.

● <美-러 스파이 사건으로 관계 냉각 우려> (6/30)

-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상대다.” 지난 24일 벅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기자회견에서 한 말임. 또 당일 두 정상은 오바마 대통령의 단골 햄버거 가게를 찾아 ‘햄버거 오찬’을 통해 우의를 과시했음. 하지만, 두 정상의 우정이 진심이었는지를 의심할 만한 일이 터졌음.
- 두 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답소를 나눈 지 불과 4일 만인 28일 미 법무부가 자국에서 활동한 러시아 정보요원 10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한 것임. 미국 측 발표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함.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9일 미 당국에 사건 진상을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고 외교부는 미국 측의 주장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미 당국이 제시한 정보들이 서로 모순되며 근거 없다는 입장임.
-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외교부 대변인은 “왜 미 법무부가 냉전 시대에나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 스스로 양국 관계 재설정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고 말했음. 이번 일로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조성된 양국 간 화해 분위기에 먹구름이 끼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 더욱이 이들 러시아 간첩이 미국 정책입안자들의 모임에 침투하고 무기류와 외교전략, 정치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동원됐다는 점에서 이들의 처벌과 별개로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임.
- 니콜라이 코발로프 국가두마(하원) 의원은 이타르타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간첩들이 땅에 파묻은 공작금을 찾아갔다는 기소 내용을 언급하면서 “마치 첩보 소설을 보는 것 같다. 21세기에 누가 그런



것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음. 전 연방보안국(FSB) 국장을 지낸 그는 “이번 간첩 사건은 미국 내 매파들이 러시아에 대해 강경 노선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알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 블라디미르 콜레스니코프 하원 의원도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미국 내 냉전 유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음.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에도 미국 첩보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똑같이 대응할 수도 있다”면서 “과거에는 간첩 혐의로 적발된 미국인들을 조용히 추방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더 엄한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음. 이는 러시아가 과거 냉전시절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보복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됨.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번 사태가 양국 관계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없지 않음. 알렉산드르 토르신 연방의회(상원) 부의장은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대규모 간첩 스캔들로 확산하지 않을 것이고 냉전으로 돌아가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음.
- 한편, 독일 DPA 통신은 이번 사건 역시 냉전이 끝났다고 해 러시아 간첩들이 서방에서 활동을 완전히 중단했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2001년 미국은 외교관 지위를 갖고 활동한 50명의 러시아인을 추방했고, 2002년 스웨덴은 2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가장 최근인 지난해 4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도 2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스파이 혐의로 추방했음. 그런가 하면 1997년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과 연방수사국(FBI) 요원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적발돼 각각 징역 23년형과 27년형을 선고받았음.

바. 기 타

● 러시아, 세계 최대 軍 훈련장 확장 계획(7/4)

- 러시아 군 당국이 시베리아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장을 더 넓힐 계획이라고 4일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음. 시베리아 텔렘바 군사 훈련장 책임자인 세르게이 쿠르슈킨 대령은 “S-400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다른 방어 무기 성능 실험을 위해 훈련장을 더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음. 시베리아 부랴트 공화국에 위치한 텔렘바 훈련장은 1960년에 건설됐으며 전체 면적이 1만3천km²에 달해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상 군사 훈련장임. 이곳에서는 러시아군뿐 아니라 시리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군도 군사 훈련을 하고 있음. 쿠르슈킨 대령은 “부랴트 공화국 당국과 추가 부지 확보 문제를 조율 중”이라면서 “예상 부지의 총 길이가 160km에 이른다”고 말했음.
- 구소련 시절 개발된 지대공 미사일을 개량한 S-400 미사일은 스텔스 항공기와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등을 포함해 초당 5km 속도로 이동하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사정은 400km로 미국 ‘MIM-4패트리엇’ 미사일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음.



● 中, 동중국해서 실탄 사격훈련 개시(7/1)

- 중국 인민해방군이 30일부터 동중국해 해상에서 실탄 사격훈련을 개시했음. 인민해방군은 1일 성명을 통해 해군의 동중국해 함대 소속 제91765부대가 저장(浙江)성의 저우산(舟山)~타이저우(台州) 동쪽 5곳의 연안해역에서 30일부터 실탄 사격훈련을 시작했으며 이달 5일까지 엿새 동안 매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행된다고 밝혔음. 인민해방군은 훈련은 중국의 배타적 수역 내에서 이뤄지며 훈련 기간에 여타 선박들의 실탄 사격 해역 진입을 금지한다면서 해군 함정의 지시를 따르라고 요구했음.
- 인민해방군의 대변인은 신화통신에 “실탄 사격훈련은 언제나 공개됐다”고 말했음. 인민해방군의 한 관리는 “이번 훈련은 정례적인 것으로, 한-미 양국이 황해(서해)에서 할 연합군사훈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음. 인민해방군 내 국방대학교의 탄카이자 교수는 “제91765부대의 이번 훈련은 이미 6개월 전부터 예정됐다”면서 “날씨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상상황을 감안해 구체적인 훈련시기가 정해졌다”고 소개했음.
-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민해방군의 이번 실탄훈련이 미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9만7천t)까지 참가할 예정인 한미간 서해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음. 또 중국 내 포털사이트들에서는 한-미 서해 군사훈련은 북한의 잠수함 침투를 저지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된다기보다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비난하는 글이 폭주하고 있음.

● 러시아軍, 극동서 대규모 군사훈련(6/29)

- 러시아군이 29일부터 시베리아를 포함한 극동 전역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에 들어갔다고 이타르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음. 내달 8일까지 벌이는 이번 훈련에는 태평양 함대 사령부와 극동, 시베리아 관구 사령부 산하 2만 명의 병력과 70대의 전투기, 30대의 전함이 참여함. 지난 2008년 훈련에 참가한 병력이 8천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올해 훈련 규모가 대폭 커졌음. 러시아군은 이번 훈련에서 실제 지상 사격 훈련은 물론 가상 공중 공격, 수륙 양동 작전 등을 실시할 예정임. 또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는 훈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니콜라이 마카로프 러시아군 총참모장(합참의장)은 28일 “이번 훈련은 특정 국가나 군사 블록을 목표로 한 훈련이 아니다”면서 “극동 지역에서의 안보와 국익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순수한 의미의 군사 훈련이다”고 말했음. 이는 이번 훈련과 천안함 침몰 사태 이후 조성된 한반도 긴장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러시아 내 일부 지적을 일축하는 것으로 해석됨. 앞서 태평양 함대 사령부 대변인도 지난달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우리는 모스크바로부터 경계태세를 강화하라는 어떤 명령을 받은 바도 없으며 함대 사령부에 전함들이 정박하



는 것은 2년마다 열리는 극동 전략 훈련 목적이지만 한반도 위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음.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